

# 지자체-대학-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하자

## 지방대학 위기로 지방소멸위기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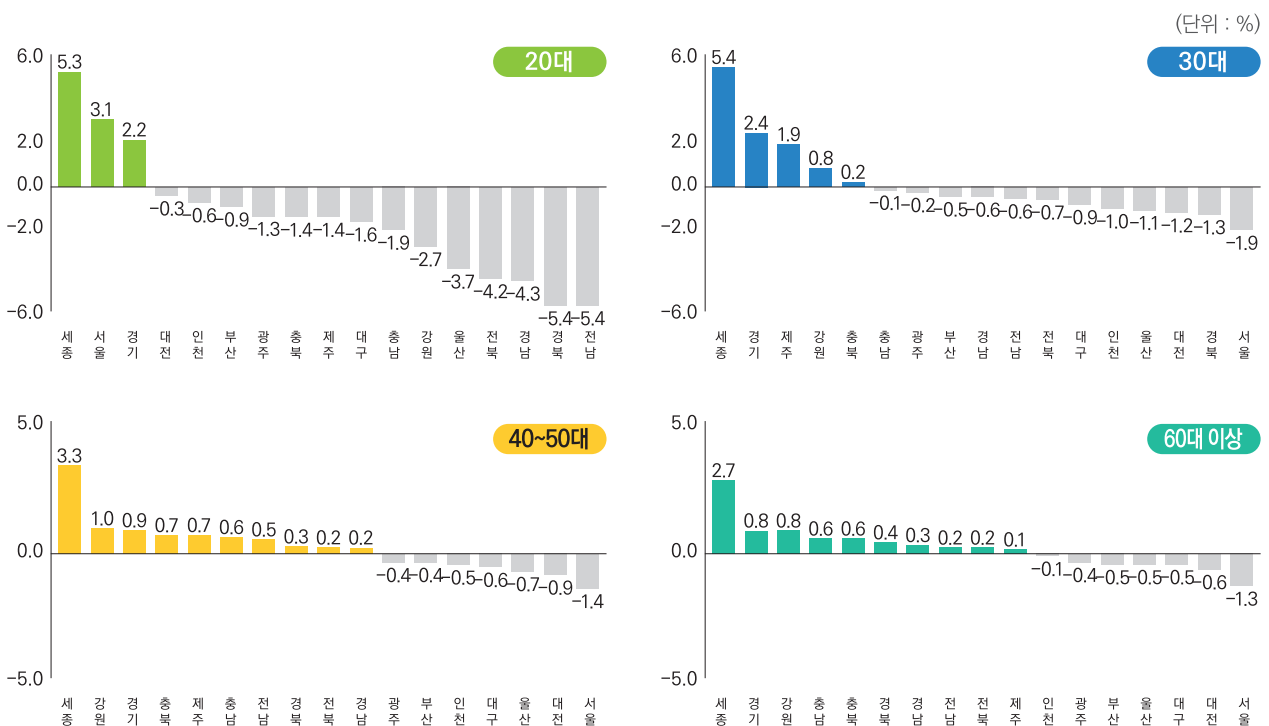
###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 심각

-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은 4만 586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미달 증가 추세
  -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발생
- 2010년 대비 2020년 전국 대학 입학자수는 8.2% 감소하였는데, 지방대학 감소율이 더 심각함
  - 울산(-17.9%), 경남(-16.6%), 전남(-16.4%), 경북(-15.6%), 전북(-14.7%) 순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울(0.9%)과 인천(1.8%)은 오히려 증가(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기반)

### 지방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활력 저하

-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%를 넘어서며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함
  -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현상 중 심각한 측면은 지방의 청년인구 감소임
-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(10대)에서 1차 유출된 이후, 구직단계(20대)에서 2차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(통계청, 2021)
  - 학업과 직업 등의 이유로 지방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율은 매우 낮으며, 지방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됨

2020년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



\* 출처 : 통계청(2021.1),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

## 지방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-대학 상생발전방안 마련

###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 지방대학 육성 필요

-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협력하여 지방소멸위기의 악순환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음
  -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(교육부, 2021)에 따르면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
  - 교육부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은 중앙-지자체간 협력 활성화에 초점이 있으므로, 중앙-지자체 간 수직적 협력체계보다는 지역 내 여러 주체간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 더 긴요함
-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또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조함
  -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학만의 위기가 아닌, 지역인구 감소, 지역경제 위축, 지방소멸 위기까지 초래되지 않도록, 지자체, 관련 산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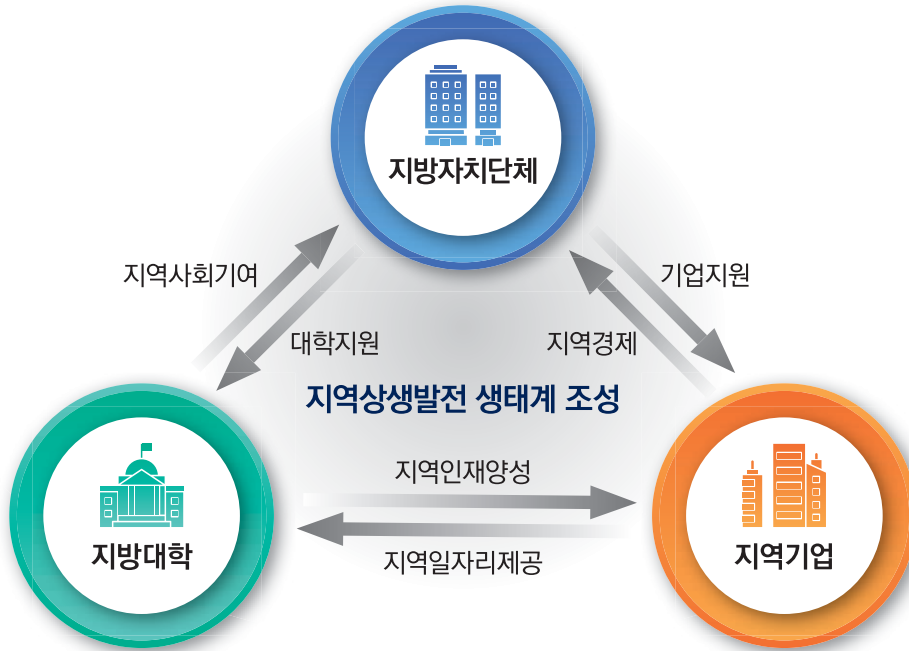
### 지자체-대학-지역기업의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조성

-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기능은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이며,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과 성장 촉진을 유도하므로, 지방대학의 육성은 지역기업 간 연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함
- 지자체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추진하므로, 지방대학의 육성정책 또한 지역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지역인재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
  - 지방대학 육성이 고등교육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대학이 주요한 혁신주체이기 때문임
- 지방대학이 양성한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산업에 취·창업하여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,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함
  - 지방대학이 고등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기 앞서, 지방대학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
  - 지역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역인재의 양성 및 배출, 지역 주력산업을 형성하는 지역기업과의 자발적 협력 등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할 명분을 대학 스스로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음

### 지자체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

-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고등교육 지원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, 지역산업 및 일자리정책,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·지원하는 것임
  - 부산광역시가 대학지원 업무를 청년산학창업국 산학협력과에서 지역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
- 지자체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, 전남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-대학 상생협력추진단 등의 구성을 통해 상생협력협의체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함
  - 이 때 지자체 및 대학의 두 주체만이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,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주체들이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

지자체-대학-지역기업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구축



\* 출처 : 이소영·박진경(2021),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- 참고자료
이소영·박진경(2021),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원문  
보기
- 내용문의
이소영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033-769-9890, sy2@krila.re.kr)
- 지난호
국책 공모사업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(이서희 부연구위원)
원문  
보기

✉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[brief@krila.re.kr](mailto:brief@krila.re.kr)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